

# 덜 주고 덜 받는 '낮은 수준' 타결 가능성

■ 한·미 FTA 막판협상 사흘째

## 쌀·차 핵심현안 평행선 美의회 협상 연장 시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28일 절반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쇠고기와 자동차의 눈에 빠져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당초 기대처럼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설정한 협상시한이 압박한 상황에서 핵심쟁점의 진전이 없어 덜 주고 덜 받는 낮은 수준의 협상 체결 가능성이 갈수록 무게를 얻고 있다.

◇쇠고기, 차 등에서 허우적=한미FTA 협상 시한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때문에 오는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이지만 양국 대표단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타결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30일중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 26일 최종 고위급 협상을 개시한 지 사흘째를 맞이하고도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분과회의와 농업, 섬유, 금융 등 분야별 고위급 협상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은 이번 협상 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올라가게 된다.

양국 협상 대표가 이들 쟁점을 놓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중에는 미해결 쟁점의 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대 쟁점인 농업 분야에서 미국측 고위급 회의 대표를 맡아온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은 29일 오후 한국을 떠난다.

결국 양국이 분야별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28일 또는 29일이 시한이다. 실제 그런 분위기는 협상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협상 전술상 빠르면 오늘중 자동차 관세 양허안을 일부 제시할 것으로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사흘째인 28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가 협상장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며 "다만 미측이 농산물 분야에서 보인 강경한 입장과 자국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압력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안을 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낮은 수준 FTA 타결에 '무계중심'=협상단이나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할때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의 FTA를 시한내 타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쇠고기 시장의 재개 방 문제에 단호한 입장이다.

김현중 본부장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 확정전에 쇠고기의 개량 프로그램을 약속해달라는 주문을 단호히 거부했다.

결국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지키려면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감해 하는 분야에서 덜 받는 수밖에 없다. 우리 협상단은 농업과 섬유 등 다른 분야를 주고받는 '빅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이 농업에서 요구 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섬유와 자동차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미미한 수준에서 제시하더라도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협상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협상 연장 가능성 '뚝뚝'=미국에서 진행중인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논의가 최종 고위급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있다.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미국 민주당은 최근 노동과 환경, 비관세 장벽 등에서 강화된 입장을 담은 새 통상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 행정부가 희망하는 TPA 갱신과 거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오는 7월1일 만료되는 미국의 TPA는 의회가 주도권을 가진 통상협상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권한 만료 90일전 업무 종료시까지 협상중인 FTA의 체결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 시한이 3월말이 된 것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대구 2011 세계육상선수권 유치 한국 '3대 이벤트' 유치 7번째국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7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케냐 몸바사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오는 2011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이하 세계육상) 개최지로 대구를 확정했다.

라민 디악 IAAF 회장은 이 호텔 바라자 컨퍼런스룸과 마쿠타노룸에서 비공개 회의와 집행이사회 25명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구가 가장 큰 라이벌 도시였던 모스크바(러시아), 브리즈번(호주)을 제치고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2013년 세계육상 개최지는 막판 대구의 강

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던 모스크바(러시아)로 결정됐다. 당초 대구의 경쟁 도시였던 브리즈번(호주)과 바르셀로나(스페인)는 탈락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을 모두 개최한 스포츠외교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한국이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세계육상은 IAAF에 가입한 전 세계 211개국에서 3천500여 명의 선수단과 각종 취재진 3천여 명이 참가하고 지구촌 60억 명(연인원)이 시청하는 매머드 이벤트다. /연합뉴스



오현섭 여수시장(오른쪽)이 28일 여수공항에서 라오스 랭사왓 수석부총리에게 동백꽃이 그려진 합죽선을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대구 이어 이젠 여수엑스포”

여수 시민들 세계육상선수권 환영... 박람회 낭보 기대

“대구에 이어 여수에서도 낭보를 기대한다.”

지난 27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가 대구로 결정되자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 중인 여수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수에서는 앞으로 인천의 2014 아시안게임(4월), 평창의 2014 동계올림픽(7월), 세계박람회(12월) 등 3개 국제 행사 개최지가 잇따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가 첫 단추를 잘 채운 만큼 희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박람회사무국(BIE) 현지 실사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에 부진한 여수시는 이번 케냐에서의 '낭보'가 BIE회원국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돼 박람회 유치 후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 행사 개최지 결정시 대륙별 안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후 인천과 평창의 유치 여부가 관건이지만 여수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를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박람회와 다른 3개 스포츠 행사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투표하는 대신 회원국 대표 즉 국가가 투표를 하는 것이어서 열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28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시민과 출향 인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유치기원을 위한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진대회에서는 김형선 전 대법관, 김종민 전 검찰총장, 강영기 전 광주시장, 텔런트 백일섭씨 등 출향 인사 10명이 엑스포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됐다.

또 BIE 회원국인 라오스 송사왓 랭사왓 수석부총리는 28일 여수를 방문, 박람회 여수 유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한-칠레 FTA 이후 과수산업 지원금 수요 예측 잘못돼 못쓴 사업비 수두룩

정부 업무평가위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립된 국내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요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평가됐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8일 '한·칠레 FTA이행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원의 FTA 이행지원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수요예측 미흡으로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역 농가사업인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사업'의 경우, 보조금 80%가 지급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 지원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 때문에 2004~2005

년 사업비 전액인 76억원이 불용처리됐고,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농특회계의 '농기계임대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91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지연, 지원대상자의 담보능

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추진과정의 관리도 중앙정부 주관사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지자체의 '농가폐업지원사업'과 한국농촌공사의 '과원규모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정

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TA 이행 지원대책의 성과 지표 대부분이 사업별 단순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돼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수요예측 등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정례화 등 사업추진상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또 다국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뉴스